與 "수정할 수도" 野 "원안대로 추진"

정국 최대 뇌관 '세종시' 선택 주목

與 총리 대안 제시-여론 수렴-정부입장 최종 확정

野 당력 총동원 저지…10·28 재보선 등 쟁점 될 듯

정국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여권의 선택이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세종시 '9부2처2청 이전' 원안에 대한 수정 방침을 굳히고 있으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의 향배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의 세종시 처리 방향이 연말 예산안 심의와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여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현재까지 세종시 문제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측면 지원하는 형태로 풀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인구 50만명 규모의 세종시가 행정기관 이전만으로는 주말 공동화 현상으로 '유령도시'가 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종시 수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안은 부처 이전 전면 백지화, 일부 부처 이전, 교육·과학도시로 성격 변경 등이다.

정 총리는 우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자문기구 성격의 가칭 '세종시위원회'를 설치한 뒤 이곳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충청민심을 의식,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정 총리가 대안을 제시하면 일단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정 총리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는 생각이다.

청와대와 여당 모두 직접 나서지는 않으면서 총리를 통해 세종시 원안 수정을 관철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물론 여권 모두가 이에 동의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선 자신이 합의해 줬던 세종시법에 손을 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야당의 반발을 뚫고 여당 단독으로 세종시법 대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는 60여명에 달하는 친박계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여당 내부의 의견조율 과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민주당은 재보선 기간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향후 정부와 여당의 수정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충청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와 연대한 궐기대회 등을 통해 총력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야5당 공조는 물론 여권 내 원안 추진 찬성론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종시 문제를 충청권을 뛰어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전국 이슈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선진당은 더욱 강경하다. 일단 재보선이 끝난 뒤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세종시 수정이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국토해양위와 행정안전위 등 각 상임위별로 진행될 세종시 수정 추진을 위한 법안 심의 및 통과를 필사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양당은 세종시 문제를 예산안 심의,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안추진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 139억원 확보

전남 보건기관 42곳 내년 신·증축

전남도는 18일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내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 13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보건기관 신·증축 및 개보수 42곳 130억원, 의료·전산장비 74곳 4억원, 보건사업용 차량 16곳 35대 3억원,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2곳 2대 2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순천·보성 보건소를 이전·신축하고 완도군 보건의료원을 증축하며 보건지소 8곳과 보건진료소 30곳도 신·증축하기로 했다.

또 여수 보건소 등 보건소 8곳에는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등을 설치하고, 도서지역 보건지소 61곳에는 비만도측정기와 치과유니트 등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양시보건소 등 16곳에 보건사업용 차량 35대를 지원하고 보성군 보건소와 강진군 보건소에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을 각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작성한 사업 계획서의 적절성과 합리성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해 이뤄지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몰디브 수중 각료회의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과 각료들이 18일(현지시간) 몰디브 기리푸시 섬에서 열린 수중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모여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매년 국토 일부가 물에 잠기고 있는 몰디브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해저 각료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녹차 좋아하는 여자, 폐렴 사망률 낮다

녹차가 여성의 폐렴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도호쿠 대학 의학대학원의 와타나베 이쿠에(Ikue Watanabe) 박사는 건강한 49~79세 남성 1만9천79명, 여성 2만1천493명을 대상으로 12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 분석 결과, 녹차를 하루 5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평균 4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성은 하루 1잔 정도만 마셔도 폐렴 사망률이 41%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은 이러한 효과가 없었다. 여성의 경우는 연령, 신체기능, 흡연 등 폐렴과 관련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감안했어도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연합뉴스

"일제도 안중근 日 법정 재판 부당성 인정"

일 외교사료관서 문서 발견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앞두고 일제가 하얼빈 의거와 같이 조선인에 의해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국제법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사료가 발견됐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신운용 책임연구원은 안 의사 의거 2년 전인 1907년 하얼빈에서 한국인 김재동 등이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에 관한 기록을 최근 일본의 외교사료관에서 발견해 18일 공개했다.

김재동 사건 직후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였던 카와카미 도시히코는 러시아가 그의 신병을 넘겨주려 하지 않자 고무라 주타로 외상에게 전문을 보낸다. 그러자 고무라 외상은 카와카미에게 "한국인들'의 신병을 인도받으라"는 훈령을 내렸고, 일 정부는 이들을 재판해 사형 등을 선고했다.

이후 이토 히로부미가 이 사건과 관련해 하야시다다스 외상에게 보낸 전문이 주목된다. 이토는 전문에서 "재외 한인 재판사무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 경우 법률 관제(제정) 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실행상 지장이 적지 않으므로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토 역시 하얼빈에서 조선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을 일본이 직접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한국은행 국감을 보라

임 동 욱
서울 취재팀장

국회의 국정감사가 어느새 막판으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그 어느 해 보다 무기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정감사 시작 전만해도 방송법, 세종시법, 감세 등으로 팽팽한 공방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10·28 재보선에 '올인'하고 있는데다 피감기관의 '배 째라' 식의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로 국감의 의미마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미디어 관련법' 전쟁으로 인한 여야의 준비 소홀도 맥빠진 국감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감사는 여러 가지로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국감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차분히 개진한 것은 물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반대 의견도 피력했다. 때로는 이 총재가 국감 답변을 통해 한 수 가르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의원들의 고성이 들리기도 했지만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깨끗이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부분의 피감기관장들은 국회의원의 추궁이나 질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토하겠다'거나 '추후 보고하겠다'며 대충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낙하산으로 임명된 일부 피감기관장들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의에 쩔쩔매는가 하면 엉뚱한 답변을 내놓아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런 면에서 이 총재가 국감에서 보여준 깊이 있는 내공은 타 피감기관장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의원들도 열의 있는 준비로 국감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D금리를 대체할 보조 금리지표 개발(강운태), 국고금관리시스템 개선(이종구), 부동산 가격 지수 개발(김효석)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 있는 질의가 쏟아졌다.

또한, 한국은행의 방만한 경영(진수희), 수의계약 문제(차명진), 외환시스템 운영 문제(배영식) 등 뼈아픈 지적도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한은 국감에서 호통을 치거나 밀어붙이기 보다는 차분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국감을 보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물론, 이번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가 모두 잘됐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일부 현안을 비껴가는 한국은행 측의 태도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준비된 국감'은 호통과 폭로, 정쟁, 대충 넘어가기로 얼룩진 국정감사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tuim@kwangju.co.kr